



濁流清論

제17호 2011년 12월 12일(월)

발행인 : 장영구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lisani@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청론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간 기간 동안은 휴간합니다.

타류청론 18호는 3월 초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숲밭에서 : 2011년 아주대학에서 시니어교수로 살아가기	1
처장에게 듣는 학교 정책 : 연구처장	8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 ISD	11
—투자가 국가 경쟁력제고, 국 제법적 의미는?	11
—투자자 국가 가소송 제도 (ISDS) 논란. 국 제정적경제적 시각	12
이명고 : 一短秋夢	13
2011년 가을학기 아주대학교 평의원회 활동 보고서	14
소식	15
소통과 답변	16

편집위원회 : 정경훈(편집책임),
구형건, 김상배, 김태승,
김혜선, 노명우, 이재호.

더불어 푸른 숲밭에서 :

2011년 아주대학교에서 시니어교수로 살아가기

지난 호 “더불어 푸른 숲밭에서”는 우리대학의 조교수, 부교수로 계시는 젊은 교수님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2011년 아주대학교에서 젊은 교수로 살아가기” 특집을 엮었습니다. 이 번 호에서는 시니어 교수님들의 고견을 듣는 “2011년 아주대학교에서 시니어 교수로 살아가기”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시고, 전공분야를 연구해 오시고, 전공 학사 일을 맡아 하시거나, 대학 본부의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데 참여하시고, 선배 동료 교수분들과 인간적인 우정과 갈등을 가지시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시니어 교수님들께서 교수사회의 분위기, 문화, 학교당국의 정책, 그리고 후배 교수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 간의 소통이 조금이나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집이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32년 교수생활의 보람과 회한(悔恨)

형형색색 물들었던 나뭇잎이 지고 맨가지와 뼈대를 들어낸 나무들과 스산한 바람과 먹구름 낀 하늘은 이제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내가 아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한지 36년이 되고 내년 2월이면 정년을 맞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세월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마치 월동준비가 안된 채로 겨울을 맞는 기분이 든다. 글을 쓰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상념과 좋은 추억과 쓰라린 기억들을 떠올리며 짧게나마 그간의 보람과 회한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나의 교수생활의 첫째 보람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회진출을 돕고, 사제지간(師弟之間)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 제자들 이상으로 학부 때의 제자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소학회 활동을 20년간 지도해 온 덕분이다. 매주 모임에 참석하여 지도하고, 학술대회, 방학MT 등 행사를 지원하고, 취업을 돕고,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기꺼이 수락하여 축복해 준 덕분이다. 솔직히 소학회 지도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겨지기도 했으며 의무감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나 언제부터인지 보람되고 기쁜 일로 변하였다. 둘째는 1995년 전국 경

2페이지에 계속

영대학 평가에서 4위의 성과를 올린 일이다. `91년부터 `94년까지 학장의 책임을 맡았을 때 경영관 건립추진(현 다산관), 신입교수 충원, 발전계획 수립, 강의평가제도 도입, 무감독 시험 실시 등 다양한 새로운 일들을 경영대학 교수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한 결과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는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학회장을 맡으면서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후원금을 모아 성공리에 행사를 치루고, ‘중소기업연구’와 더불어 자매 학술연구지인 ‘벤처경영연구’를 창간한 것이다.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을 맡아서는 학회의 학술지를 학진 등재지가 되도록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한 것이 보람으로 남는다. 넷째는 6년전에 창립된 경영교육인증원에 참여하면서 3년 전부터 부원장 겸 인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0여 개 경영대학에 대한 인증심사를 대과 없이 수행하여 우리나라 경영대학과 경영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이다.

교수생활 30년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는가? 기회를 놓쳐 아쉬웠던 일, 가슴 아팠던 일, 화나고 불쾌했던 일, 절망스럽고 비참했던 일 등 크고 작은 회한이 적지 않게 기억된다. 가장 어려웠고 아픈 추억은 김덕중 총장 퇴임 운동을 추진했던 교수협의회와의 마찰이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임총장 취임 직후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보직을 맡고 있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때라 나만 살자고 쉽게 사표를 내고 떠날 수도 없었고, 임무를 수행하자니 교협에 맞서는 입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당시에 여러 명의 교수가 사무처장실에 함께 몰려와 먹살잡이를 하고 ‘취새끼 같은 놈’이란 욕을 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경영대학 학장 선임 문제로 교수들간의 화합이 깨지고, 갈등이 증폭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일찍이 공대처럼 직선제를 통하여 학장을 선임하거나,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면 피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후회스럽다. 세 번째 힘들었던 일은 초대학장과 교수들과의 갈등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장보의 위치에 있었던 나는 학장을 도와야 할 입장이기

도 했고 교수진의 한 구성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간 조정의 역할을 하려 했으나 결국 교수들 편에서 학장의 퇴진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학장은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었으나 대학본부의 편법처리로 10여 년의 송사 끝에 학교가 패소하여 큰 돈을 물어주게 되었는데 이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낀다. 네 번째는 학과장과 학장직무대행시 윗선으로부터의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자진 철회시켰던 일과 경영대학보직자나 교수들의 심사 없이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임용하려 한 것을 철회시킨 일이었다. 당시 추천된 인사가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내가 직접 과천 정부청사로 당사자를 찾아가 지원을 철회하도록 설득하여 관철시켰으나 두 번째 인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자리를 걸고 싸워 경영대학 교수들의 의사대로 임용을 저지시키고 바로 보직 사표를 냈다. 마지막으로 남는 후회는 학자로서 남겨야 할 연구업적이나 저서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점이다. 아주대학에 초창기에 부임하여 입시철이면 학생유치를 하느라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졸업 때면 학생취업을 부탁하러 친구 선배 찾아다니면서 시간 보내고, 1주에 15시간씩 강의하고, 이런 저런 보직을 12년 이상 하다 보니 연구할 시간도 책을 쓸 여유도 갖지 못하면서 정년을 맞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러나 내가 아주대학에 온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대학의 건물이 몇 배로 확장되고, 나무들이 곱게 자라 4계절 아름다운 조경을 이루어 멋진 캠퍼스가 되고, 훌륭한 교수와, 직원들,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나처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며 미력이나마 학교발전에 기여했다고 자위(自慰)해 본다. 아주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경영학부 용세중

시니어교수로 살아가기

시니어 교수로 살아가기라는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야 제가 아주대학교에 몸담았던 세월이 18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제주와 지식의 깊이가 변변치 않은 제가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모시고 스승의 은혜를 한껏 누리면서 하고 싶었던 연구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게도 가르친 제자들이 생겼고 이제는 그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 줍니다. 동료교수들, 특히 같은 과에서 일하는 동료교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동료교수들도 제 곁에 있습니다. 이 학교에 몸담고 있었던 동안 저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50대 중반을 넘긴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중년이 되었고 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건실한 청년들로 자라났으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 학교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국가로 비유하자면 강소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법학전문대학원과 약학전문대학원을 유치했습니다. 의료원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잘 알지 못 하므로, 의료원만 놓고 보겠습니다. 학술연구 및 진료 수준과 기관의 규모는 1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신 교수들 중 명의의 반열에 든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학술분야에서 권위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치하기 어려운 연구기관들을 유치한 사례는 여럿 있었습니다. 연구비 수주와 논문게재 실적 역시 우수합니다. 몇 년 전 진료규모에 있어 전국 단일 병원 중 5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순위가 약간 내려앉았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입니까. 이 모든 발전 밑바탕에는 교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이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몇 가지를 잃어버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교수의 힘입니다. 처음 우리학교에 올 때 받은 인상은 교수님들의 기개가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에게는 “아니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의 어른들

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교수 혹은 선비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해도 좋고 그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힘을 느끼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에 그러합니다. 처음 의과대학교병원이 개원하여 정식으로 학교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개원했던 사립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질적 대우가 좋아서였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너희는 교수같구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힘의 위축과 비례하여 교수들 간 유대감과 아주대학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교수회(교수협의회)임원을 해봐서 그런지 예전과 비교하여 요즘 교수들의 “관심 없음”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잃어버린 것 중에는 재단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타 단과대 교수님들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저희 의과대학교수들은 처음 이 학교에 올 때 재단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단이 학교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교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No 라고 말 할 수 있는 권리만을 재단은 누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당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먼 미래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교수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면 발전이 온다고 말 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도록 자주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교수들 사이에 친교와 소통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교와 소통을 위한 작은 모임이 많이 생기는 학교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런 일에는 시니어 교수도 얼마든지 힘을 보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부 정신과학교실 정영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시니어 교수로서 하고 싶은 말을 써달라고 원고를 부탁 받는 순간 나는 망설였다. 21년 남짓 재직한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재직한 분들도 적지 않거니와, 청운의 꿈을 품고 아주대학교에 부임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내 나름대로의 구상과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태껏 지내온 내가 동료 후배 교수에게 귀감이 될 만한 ‘시니어 교수’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글에서 거창한 논의보다는 내가 평소에 가장 크게 느껴왔던 것을 술회하고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는 병원, 특수전문대학원, 단과대학 신설, 연구 업적 제고, 각종 외부연구프로젝트 수주 증가 등 외형적으로 이룩한 성장과는 반대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눈에 띄게 잃어버린 것, 그것은 ‘밝은 웃음’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운동을 다 같이 전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본다.

내 나름대로 회고해보건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밝은 웃음을 잃기 시작한 것은 학부제 실시와 대학평가 준비로 학교 전체가 복세통을 이루던 95-96년도로 기억된다. 그 이전까지 아주대학교는 70년대부터의 가족적인 학교 분위기를 이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몰아치기 업무를 시키듯 대학평가 상위진입을 위해서 진행했던 무리수에 이어, 대학을 돈 버는 회사꼴으로 여기고 대학구성원들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노무자 정도로 생각하는 대학수장의 편파적인 드라이브 정책은 구성원들의 균열을 가져왔다.

이어서 재단과 외부의 지원을 끌어와 전체 과이를 키우는 일이 없이 실시한 업적평가와 교수 연봉제는 대략 기억하건대 “자신의 급여액을 타인에게 알릴 시에 처벌 받는다”는 이상한 구절 - 연봉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다면 이런 구절을 삽입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 을 맨 끝에 첨

가한 연봉통지서를 시작으로 제로섬 놀이를 함으로써 교수간에 유치하고 이기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의 급여를 하락시킨 셈이 되었다. “가족 많다고 일 잘하나? 연구, 교육 잘하나?”며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사라지고 4년간 급여액 동결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더욱 불행한 것은 구성원간의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미덕이 현저히 약화된 사실이다. “신임 때는 공손하고 상냥하게 인사 잘 하더니 주요 보직 맡고부터는 인사도 안 하고 목이 뻣뻣하다”고 언급되는 교수도 생겨났으며 여러 번 회의석상에서 얼굴을 본 사이인데도 마주쳤을 때 인사를 안 하는 교수, 직원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교직원 식당에서 다른 단과대학 선생님들과도 같이 어울려서 농담도 하며 파안대소하던 이전의 식사 분위기도 점차 사라져 갔다. 특혜를 받는 측은 표정관리를 해야 했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측은 점차 분노의 감정이 쌓여 갔으니 순수하고 명량한 웃음이 있을 자리는 점점 없어져 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말이 너무 길어질 듯하니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우리가 명량한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구성원 간에 명량한 인사하기이다. 민주, 평등 사회도 타인의 존중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이라면 권력을 잡아 행사하고 싶어서 혹은 큰 부자가 되려고 대학사회에 들어온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구와 교육의 기관에서 봉직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서로 간에 무슨 큰 세속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오순도순하게 살 수 있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서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우선 인사의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나는 믿는다. 예컨대 2023 선포식을 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행사보다 나는 구성원간의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주공동체의 결집력도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분위기를 보고 배우면 공동체의식도

생겨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교본부에서 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관료주의적 규제, 관리, 통제에 입장을 보이거나 축소지향적이어서 구성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대학수장은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대학본부는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되도록 지원해주려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진취적인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란다. 내가 주위에서 보는 동료 후배 교수들은 각종 위원회와 소소한 행정업무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면서도 모두 연구와 교육에 걸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교수에게 행정적 업무와 잡무를 줄여주고 교육, 연구 지원을 증대하며 다른 한편으로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애교심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학본부의 몫이다.

10여 년 전 방한했던 미국 듀크대 코헤인 총장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지하면서도 즐거움에 넘치는 진리 탐구의 분위기가 캠퍼스에 넘쳐나야 한다. 진정한 초일류대학은 바로 그런 학교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동감하면서 나는 추가하건대 우리 학교가 유수 명문대학교로 도약하려면 우선 구성원 간에 즐거운 분위기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연구와 교육을 맡은 교수나 행정지원업무를 맡은 직원 모두 더욱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우리는 모두 평생직장의 동료들 아닌가? 우리 캠퍼스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굳어 있거나 쫓기고 있는 듯하거나 혹은 무례한 표정이 걸히고 우리 모두의 얼굴에 명랑한 웃음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은 우리 학교가 강소대학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믿는다. 학교 구성원인 우리 각자와 대학본부 모두 스스로 성찰해볼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인문학부 강충권

소통과 감동

팔달관 5층 교수휴게실 회의탁자 위 바구니에 지금도 자주 빛 국화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다. 가을이 감을 아쉬워하듯 계절의 수문장 노릇하고 있다. 올해로 강단에 선지 30주년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는 투고논문이 게재거절 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능력이 못 미치더라도 분수를 알고 감사할 일로 받아들이니, 마치 목적지를 뒤로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산하는 기분이다.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면 남은 10학기가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기도 해 하루하루 마음을 추스르고 지난날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벌써 오래 전 일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실시되던 94년 입학대책을 맡아 동분서주 하던 때 일이다. 어느 홍보 전문 업체가 말하기를 아주대학은 기존 대형 사립대에 비하여 때 묻지 않은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홍보를 잘 하면 금방 5위권 대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Top of Five 기치를 내걸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비리로 얼룩진 것처럼 무

분별한 전자메일이 오르내리고 총장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더니 급기야 총장이 두 번씩이나 물러나는 사태가 바로 우리 대학에서 일어 난 것이다. 강의실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엎드려 잠을 자거나 수업 중 수시로 드나들기도 하는 등 수업태도가 불손하고 과거의 열정을 볼 수가 없다. 그 원인이야 복잡적일 것이다. 필자도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터 지난 60 학기 무언가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에 헌신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음에 늘 부채로 남아 있다. 그것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직분이나 본분에 관한 것이다.

필자가 대학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야 했던 책으로 『국화와 칼』이 생각난다. 이 책은 아름답고 섬세한 국화와 잔인한 칼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적 의식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외양은 겸손하면서 양보할 줄 모르고 은혜를 베풀지만 포용하지 못하는 속성은 타산지석으로 여전히 필자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든가 정의를 표방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이중적 삶의 행태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교수로서 본분은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리라. 그런 명분으로 아주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에 하여 해를 끼치거나 앓았는지 되돌아본다. 대학 시절 매년 국화가 필 때쯤이면 유난히도 동승동 앞길에는 최루탄이 난무했는데 그때마다 이공계 대학생은 실험실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하고서도 위안을 얻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계층적 위계질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충성도 하지만 집단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칼도 마다 않는 일본인의 집단문화가 새삼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이 대학에서 우리는 어쩌해야 하는가 자문해보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대학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로 다양성을 들고 싶다. 다양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있어야 하고, 어느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이나 평등도 이런 포용성 바탕에서 의미 있게 될 것이다. 필자가 유학시절을 보냈던 프랑스란 나라는 1920년대 등소평이 노동운동을 하였던 곳이고, 공산당이 자유롭게 활동하여도 늘 변방에 머무를 뿐 아니라, 등록금이 거의 없어도 대학 교실은 넘쳐나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과 이념적 스펙트럼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프랑스 사회가 마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의 한국 상황과 대비되어 부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바뀐 이 시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나타난 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서로 공감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힘이다. 140자 이내 몇 줄의 글이 순식간에 수십만 사람을 움직이는 현실을 보라.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은 재고해보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추종자(팔로워)도 트윗이 감동을 주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거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려는 도구로 이용되게 되면 언제든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 방식도 대학을 운영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일제시대 조병옥 선생은 제자가 60원 훔친 죄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게 되자 자신이 잘 못 가르친 때문으로 대신 매를 100대나 맞았다는 일화

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스승을 따르는 전형을 보여 준다.

필자는 몇 해 전부터는 강의실에서 야단치는 일이 없어졌다. 당위성만으로 학생들을 움직일 수 없었고, 클래스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강의라면 필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 학기 중반부터는 수업 분위기가 한결 나아짐을 목격한 것이다. 대학 정책수립도 단순한 설문지조사나 전자메일 또는 개강총회와 같은 형식의 여론에 의존하기보다 더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도 지도층부터 더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층에는 관용을 우선하는 것이 더 감동을 주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최근 학교의 중요한 정책이 너무 쉽게 바뀐 것이다. 학부제가 실시된 지 10여 년 이제 정착될 때 되니까 교육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주요대학 따라가듯 너도나도 학과제로 되돌아가고, 자유전공 모집은 학생 질 저하란 이름으로 시행 몇 해 되지 않아 사라지고, 융합이 살 길이라고 하는 시대흐름은 학문융합을 발전의 한 축으로 설정한 대학에서마저 거꾸로 간다면 어디에 발 붙여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정책이나 제기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한 달 한번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의제를 자유롭게 발굴하여 끝장 토론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지난 수년 우리대학이 시끄러웠던 것은 발전을 위한 과정이었고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내부의 진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아주대학은 충분히 투명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한계도 충분히 드러난 이상 탐심이나 다툼보다는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단결하기를 바란다. 평교수는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고, 보직교수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직원은 대의를 살피 행정이 물 흐르도록 하고, 재단은 건전한 사학으로 본디의 의무를 다하는 대학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응용화학생명공학부 이석현

처장에게 듣는 학교 정책

연구처장 유재석

1. 아주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역량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바라보는 아주대 교수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표 1> 최근 3년간 아주대학교 수탁연구과제 수주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건수/백만원)

연도별 계열별	2011년		2010년		2009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인문사회 계열	48	1,485	50	2,600	58	3,791
이공계열	417	32,108	495	41,227	419	38,462
의학/간호학 계열	338	20,234	406	27,551	398	17,107
계	803	53,827	951	71,378	875	59,360

주1> 2011년은 12월 2일 현재 기준 실적임

위의 표와 같이 우리 대학은 꾸준히 연구비 수주 건수 및 수주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기본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교수진이 풍부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BK21사업, WCU, ERC, ITRC 등의 대형국책과제를 수주하여 활발한 연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연구 환경은 국내에서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 공간, 우수한 연구자의 확보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모두 해소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단기적 해법으로 유사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연구실을 운영하고 대학원생을 지도한다면, 자연히 연구그룹이 형성되고 연구 경쟁력도 좋아지는, 그래서 더 큰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에서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간편화 또는 편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연구비 사용 및 정산과 관련하여 편리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모든 직원이 연구지원 기관을 대신한 관리자가 아닌, 연구자(교

수)의 입장에서 연구비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10년 한해 본교에서만 500여건의 외부 연구과제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약들에 대해 지원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다보니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연구비를 사용하고 정산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에서조차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별로 공포한 세부 관리지침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실제 연구비를 집행하는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다양한 지원기관의 규정을 수용하여 현실적인 연구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변경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규정이 산학협력단 예비규정이 아닌 학교 예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보니 숙박비 등이 연구과제에 적용하기에 비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이를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공표토록 하는 등 연구과제수행에 불합리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정산 시 산학협력단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서류를 복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비 전자정산 시스템(ARES: Ajou Research Electronic-calculating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자께서 제출해 주시는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서 스캔하여 DB로 구축해 놓음으로써 AIMS에서 수시로 증빙자료와 무통장 송금증까지 검색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증빙자료에 대한 스캔을 진행 중이며 작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정식으로 교수님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원기관에서 규정하는 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의 한도 내에서 연구자 분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불편사항 등을 산학협력단 단장을 비롯한 팀장, 직원 또는 과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 직접 느끼신 개선 의견 또는 불편 사항은 꼭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교수들의 연구 활동은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 활

동 지원 문제는 대학원만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연구 활동 진작을 위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와 대학원생 양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매우 밀접합니다. 대학원과 협력하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지만, 연구처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아주비전 2023 액션플랜'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 공용공간사용 사업과 연구수월성 장학금(fellowship)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 2> 아주비전 2023 액션플랜을 통한 지원

사업명	주요 진행내용
연구 공용공간 사용사업	[목적] 연구실 공동운영 및 공동 지도교수제 유도 [내용] 1) 인접전공 또는 두 개 이상 전공의 연구실 공동운영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공 연구실에 대해 공동운영 유도를 2) 이렇게 형성된 공동운영 연구실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공동 지도교수제를 실시하도록 동시 유도를 3) 연구실 공동운영 및 공동 지도교수제를 실시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제공 4) 연구실 공동운영 및 공동 지도교수제는 Young Faculty Forum 시행을 통해 신입 교수 사이에 자연스러운 학제 간 연구그룹 형성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
연구 수월성 장학금 (fellowship) 신설	[내용] 연구수월성 장학금은 입학생의 능력 평가와 지도교수의 연구 업적에 따라 장학인원 배정 1) 연구수월성 장학 선정 기준 - 학생의 학습능력, 잠재력, 연구과제 참여율 및 수행능력, 연구 결과물, 지도교수의 연구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학생 선정 - 장학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연구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장학금 지급을 통해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성 장학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과제 참여율 및 수행능력, 연구 결과물, 지도교수의 연구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달성된 연구 결과물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의 장학임 2) 정부의 GPS(Global Ph.D Scholarship)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3) 정부 장학금 수혜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 학생 개인의 proposal 제출을 통해 우수 정부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추가 장학금 지급

4. 향후 산학협력단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술 발굴 및 이전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학협력단 운영의 mission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 할 것입니다. 기술수익의 창출은 앞으로 우리 대학 재정수익구조 개선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관리 분야라고 하겠

습니다. 이미 유수의 국내대학들이 기술이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금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나타난 우리 대학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등록현황과 기술이전 수입액(Technology Transfer Income) 현황은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2011년에 진행 중인 실적으로 반영될 2012년에는 지재권 부분에 있어 교내 컨설팅(단계별 IP 컨설팅)을 통한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증대와 기술이전 부분의 기술이전 계약 기술료 입금 증대로 각각 20위권과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 3> 2010, 2011 아주대학교 지적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 수입액 지표(중앙일보 평가)

구분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술이전 수입액 (Technology Transfer income)			
	가중치	실값	순위	점수	가중치	실값	순위	점수
2011	10	0.70	31	5.13	10	3,556.68 천원	17	5.48
2010	10	0.5	23	5.21	10	2,217.27 천원	27	5.14

주1> 2010.4.1.기준 과학기술 교수수는 464명

주2> 2010년 지식재산권등록건수는 69건

주3> 2008~2010년 기술이전수입액 합계는 1,661,000천원

기술수익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단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학본부와 함께 자체적 전문 인력운영체제를 심도있게 협의 중이며, 이로 인해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증대와 고용안정을 꾀하고, 교수님들의 기술특허가 최대의 수익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는 연구재단으로부터 선정된 TLO선도 대학 사업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 등 정부부처의 대학지원 정책이 지원금액 규모나 형태상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지원 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 산학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의 지원정책 역시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 역시 학교차원의 전략적 산학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체질개선과 실적축적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 같은 전문 인력구축과 산학협력 기반 정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실행을 통해 직·간접적 수익창출의 증대를 꾀할 것이며,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개편과 우리 대학만의 특화요소를 반영한 대학교육, 연구활동 운영을 통해 교수님들의 왕성한 연구결과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기술특허 등이 양산된다면

집진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이 향후에 지적재산권 등록과 기술이전 수입 증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4> 기술수익 증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

구분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
지적재산권 부분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교내 컨설팅의 고도화 - 아주 단계별 IP 컨설팅(1단계-지재권 교육, 2단계-미출원 교수 특허인식제고, 3단계-랩 맞춤형 컨설팅, 4단계-발명자 인터뷰)의 확대 시행 및 품질 제고 2) 논문초고 단계에서 발명신고 활성화를 통해 출원 건수 증대 3) 전담특허사무소 활용 - 재평가 시 등록률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특허 발굴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4) 연구과제 계약 시 특허출원을 실적으로 제출하도록 권고
기술이전 부분 (Technology Transfer Income)	1)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증대 2) 기술이전 부분의 전문 인력 확보 - IT분야, NT분야 3) 국내외 기술거래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MOU체결, 본교 보유기술 목록 제공, 기술이전 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4) 기술거래를 위한 온라인 마켓 개설 - 수요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본교 기술을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5) 연구과제 계약 시 계약 업체로 기술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

※ 교과부에서는 교수 업적 평가에 지적재산권 실적 및 기술이전 실적의 반영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음. 우리학교에서도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임.

5. 현재 우리대학은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연구진실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처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교수님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AIMS2에 공지문을 팝업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에게도 연구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입학 시, 또는 연구 노트 교육 시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윤리 교육전문가 양성 과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과 관심있는 교수님들에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국가R&D사업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교수님들과 대학원생의 연구노트 활용 촉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특허청 R&D특허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노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 윤리에 관련하여 교수회의 좋은 의견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수들의 연구 활동 지원 내용 중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구처에서는 논문게재료 지원, 국내·외학술회의참가비 지원, 학술회의행사개최비 지원, 국제학술지게재논문교정료 지원 등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5> 최근 4년간 학술활동지원 건수 및 금액 현황

(금액단위: 천원)

구분	논문 게재료		국내학술 회의참가		해외학술 회의참가		학술회의 행사개최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교정료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 원 액
2008	265	82,707	106	8,500	61	52,000	6	3,637	135	25,698
2009	283	79,666	100	8,000	59	48,500	6	4,644	143	29,946
2010	310	89,789	79	6,300	57	46,500	6	3,055	184	40,042
2011	231	70,723	70	5,400	44	38,000	4	2,203	200	42,299

주1> 학술활동지원제도 활용 빈도수는 “논문게재료 > 국제학술지게재논문교정료 > 국내학술회의참가비 > 해외학술회의참가비 > 학술회의 행사개최비” 순이며,

주2> 최근 3년간 현황은 국제학술지게재논문교정료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소하는 추세임.

이외에도 대형 연구 과제 수주를 위한 PI 지원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는 항상 지원해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또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지원제도, 연구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항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 ISD

전문가가 보는 현안 이슈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 국제법적 의미는?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여러 쟁점 중 하나는 소위 ISD였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ISD)로 소개된 동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로,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 많은 국가들은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투자협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 투자를 불측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투자협정에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투자자에게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어 만일 해당 조치가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는 해당 투자 분쟁 해결 forum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이다. 방안은 투자자의 국적국의 법정, 또는 투자유치국의 법정, 아니면 제3의 기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중 선택의 문제이다. 한미 FTA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ICSID를 투자분쟁해결 포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투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서방 선진국들이 해외로 진출한 시기와 함께 한다. 당시의 투자 관련 쟁점은 자국의 투자 보호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준 열사가 순국한 헤이그 만국평화박람회를 잘 알려져 있는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국제투자보호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었다. 당시, 남미 등 개도국 진영은 국가가 채무 상환의 수단으로 무력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드라고주의(Drago Doctrine)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내용은 서방선진국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는 당시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개인 기업이 외국과 체결하는 투자양해각서에 관

련 분쟁에 투자자 국적국의 개입, 소위 외교적 보호권을 투자자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조항-칼보(calvo)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당시 국제법은 투자자 보호가 결국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국가간의 분쟁, 그것도 무력 분쟁으로 비화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무역에 있어서 지나친 보호주의와 투자 관련 국가들의 이러한 관행은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1930년 국제연맹당시부터 시작하여 2001년 마무리된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논의의 시작이 외국의 재산의 부당대우에 따른 국가책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국가책임의 역사가 국제법에서 투자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정치적 기구로서 국제연합을 그리고 경제적 기구로서 브레튼 우즈체제 즉, 무역 관할은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 그리고 금융과 재정적 역할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다자간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ITO는 미국의 불참으로 불발되고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의 형태인 GATT로 대체되었으나,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로 대체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종전 후 평화체제의 설계자들의 의도대로 국제경제 체제는 완성된 셈이다. 그리고 동 체제에서 국제투자의 보호는 사후 분쟁해결은 World Bank 산하의 ICSID에서, 사전 예방으로는 다자간투자보증기관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법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중대한 이익과 외국인의 투자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ISD는 국제사회의 오랜 경험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이다. 한미 FTA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협정의 실제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지, 협정의 적용 및 운영 관련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S) 논란: 국제정치경제적 시각

사회과학부 정치외교전공 이왕휘

지난 달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독소조항 중의 하나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다. 이 제도에 정치적 논란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이 제도가 분쟁을 과연 공정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둘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국가 주권이 침해되는가?

한미 FTA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공정한 중재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주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는 강대국(미국)에게 유리하며 약소국(한국)의 주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권의 구현체인 국가기관 내에서도 의견은 통일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FTA를 추진하는 행정부와 이를 비준한 입법부(더 정확하게는 여당)는 주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판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ISDS가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리는”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직 양국간에 이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더 맞을 것인가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양국의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예외의 인정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미국 의회는 1920년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 창설된 국제연맹을 의회의 선전포고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50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국제무역

기구(ITO)는 고용법 및 반독점법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비준을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출범을 앞두고 해외 파병 미군이 ICC에 대한 항구적 면책특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유엔평화유지군에서 전면 철수하겠다고 요구하여, 1년간 기소면제라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더 나아가 2003년 미국은 33개국과 미국민 ICC 기소면제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ISDS가 미국에게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제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에 이 조항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국제법과 국제제도를 국가주권 또는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국제기준 또는 모범규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제의결안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WTO 협정의 부속협정들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했기 때문에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조례의 상위법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선례들을 고려할 때, 미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부에 제소했을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힘들 것이다.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이 번역 실수로 2011년 5월 철회되었다 6월 재상정된 사실을 보면, 우리 정부가 ICSID의 중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ICSID의 제도적 중립성이 소송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어도 당분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 기고

一短秋夢

쾅! 쾅! 쾅!

귀에 익은 힘차고 절도 있는 노크소리……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역시 그였다. 왈칵 연구실 문을 열어 쫓히며 들어온 그의 한 손에는 두 어장 남짓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교수님, 이거 봤어요?” 내 연구실로 한 발짝 성큼 들어옴과 동시에 내 앞에 놓여진 녹차 잔에 미세한 진동이 울려 퍼질 듯 찌렁 찌렁하게 내뿜은 그의 목소리는 햇볕 따듯한 오후의 나른함을 일순간 날려버리기에 충분하였다.

“그게 뭐예요?” 반쯤 감겨 있던 눈을 치켜 뜨며 받아본 그 서류에는 “연구활성화를 위한 신입교원관심 연구분야……세미나”라는 긴 제목이 붙어 있었다.

“아니, 우리 전공에 새로 오신 교수님이 제게 무슨 참석 불가에 관한 사유서에 사인을 해 달라기에 교학팀에 문의했더니 지난 주에 이런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그는 황당하다는 듯 내 얼굴을 힐끗 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근데, 이거 어떡해야 해요?”

“난들 어떻게 알겠어!”라는 무조건반사적인 즉답을 애써 목구멍 아래로 억누르며 나지막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글쎄요. 뭘 내용인지 먼저 찬찬히 살펴 봅시다.” 나는 시간을 벌려는 상투적인 답을 한 후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내 앞에 던져진 서류에 천천히 코를 박았다.

서류 내용인즉슨 2009년 이후 학교에 오신 신입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학기말 기간 중 1박 2일간 총장님과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약 40여명의 대상자 전원이 총장님 앞에서 5분 간 각자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발표를 하고, 이 후 5분 간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데,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불참 사유서를, 참석하면 소속 단과대 학장 업적급을 반영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거 언제 결정된 거예요?”

“몰라요. 신입교수가 불참 사유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알았지, 아님 저도 모르고 넘어 갔을 거예요.”

“그럼, 학장님은요? 교무처장 전결이긴 해도 이런 사안은 교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나요?”

본부행정은 해 본적도 들어 본적도 없는 떨거지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 봐야 별다른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학장님, 방에 계시죠. 차라리 거기 가서 여쭙보면 어떨까요?”

“그게 낫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떨거지 교수들은 무슨 큰 묘책이나 찾아낸 것처럼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학장님 연구실로 향했다.

“똑, 똑, 똑!”

“예, 들어 오세요.”

“아, 학장님. 마침 방에 계셨군요. 혹시 이 사안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몇 년 선배 교수랍시고 내가 학장님 코앞으로 그에게 전해 받은 서류를 들이 밀었다.

“이게 뭔가요?” 난초에 물을 주다 갑자기 들이 닦친 두 교수의 무례함을 애써 외면하며 학장님의 두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다.

“아, 이거요. 글쎄, 내가 아파서 회의에 불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정이 된 것 같군요. 근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별일도 아닌 일에 웬 호들갑들이냐는 표정으로 학장님은 우리 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 보셨다.

“학장님. 학교가 무슨 자동차 영업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업사원들 소장 앞에서 이달에는 차 몇 대 팔겠습니까. 뭐 이런 실적 서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 안한다고 불참사유서 써 내라는 건 또 뭐구요? 안 그래도 학교 온 지 얼마 안돼 모든 일에 서투르고 생소한데다 연구업적 강화시켜 재임용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불만해 하고 있는 조교수들에게 불참사유서 내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어요! 또 참석하면 하는 거지, 왜 총장이 주관하는 본부 행사에 참석했다고 각 단과대 학장 업적급 더 주라

는 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아 그거. 그건 그대로 안 될 거예요. 어림 없는 것이지.”
내 적나라한 말투가 거슬리셨는지 말끝을 자르며 학장님께서 대답하셨다.

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가 갑자기 연성을 높이
며,

“아니, 학교가 왜 자꾸 이런 엉뚱한 짓을 해요. 수도권을
아예 지방으로 내려 보내려고 학교에서 작정을 했나요? 서
울에 있는 모 여대가 이런 짓을 해요. MT, 교수세미나 참
석 출석체크하고 있구요. 우리라고 이런 일 벌어지지 말라
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조교수일 때 이런 일은 없었잖
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신 것
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분야에까지 식견이 높
은 지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 같은 떨거지 교수들은 같은
과라도 세부전공이 다르면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뭐 하는
지 모르는데, 총장님은 전혀 다른 전공이라도 딱 5분만 발
표를 들으면 다 파악이 되시나 봐요. 우리 총장님의 전공을
초월한 학문적 깊이에 넘쳐나는 경외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유구무언이에요. 거기다 체력까지 완전 짱이네요. 대략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잡고 10분 간만 발표, 질문에 걸리
는 시간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총 400분, 약 7시간인데
이거 웬만한 체력 가지고 견디기 힘든 것 아닌가요!” 나도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그리고, 이게 교무처 소관이 맞는 거예요? 언제부터 연
구활성화에 관한 일을 교무처에서 관장을 했어요? 그럼 요
즘 연구처는 뭐해요?”

계속되는 우리의 질문에 인내심을 점점 잃어가는 학장
님께서 점점 눈꼬리가 높아지시기 시작하시더니,

“그만하지. 학교가 선의를 가지고 잘해 보려고 한 건데..”,
순간 학장님의 말을 자르며 내가 끼어 들었다.

“예? 선의요? 학장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본부 보직만 맡으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화수분처럼 솟
구치는 애교심을 주체할 수 없는 열혈지사들이 되나요! 아
니, 이 건만 해도 그래요. 학교 밥 먹으며 건전한 상식을 가
지신 교수님들 머리 속에서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가요?” 학장님의 소극적이고 학교를 두둔하는 말에 아드레
날린이 순간적으로 심장을 자극함을 느끼며 그에게 대들듯
이 목소리를 높여대고 있었다.

내 눈 속에서 야수의 흥포함이라도 본 것처럼 흠짓하던
학장님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진정하세요. 내가 교무처장을 한번 만나 보지요. 설마
총장님께서 교수님들이 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겠어
요. 신입 교수들과 직접 만나 고충도 듣고 격려도 하고 하
려는 거겠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제 조교수도 아니고 당
사자들도 아닌데 이렇게 학교 일에 참견하는 것도 별로 모
양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
고……”

“부르르르” 마주한 테이블이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림의
진원지를 따라 시선을 쫓아가니 테이블 한쪽 끝을 쥐고 있
는 그의 양쪽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마치 금방이
라도 튀어 날 올 것처럼 그의 손목 위의 파란 힘줄이 용트
림을 하고 있었다. 손목에서 팔뚝 그리고 그 위를 따라 올
라간 나의 시선에 별정계 상기된 채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들어 온 순간……

쾅! 쾅! 쾅!

예기치 못한 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목소리를 가다
듬으며,

“누구……”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내 연구실로
성큼 들어선다.

“어, 주무셨어요. 깨워서 죄송해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
재외국민 면접해 주실 수 있죠!”

어, 꿈이었구나!

어쩐지. 자나깨나 학교 발전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시고,
학교를 위한 일이라면 대치동 학원장도 마다 않고 만나시
는 우리 총장님께서서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시지. 직원 분
들도 절대로 총장님의 의도와 다르게 공문을 작성할 분들
이 아니시고..

오늘따라 늦가을의 햇볕이 너무 따사롭네.

2011년 가을 학기 아주대학교 평의회회 활동 보고

평의회 · 교수회 의장 강명구

아주 학문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겸 대학 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대 강명구 교수입니다.

2011학년도 가을학기 대학 평의회 활동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추경 1, 2차 자문과 학칙 개정 및 기타 학내현안에 대한 일상적 업무이고 다른 한 부분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개방이사 3인의 선임 관련입니다. 추경 자문 관련한 일상적 업무는 아직 회의록취록이 정식으로 정리가 안된 관계로 정식 보고는 추후로 미루고 보다 중요하고 급박한 사안인 개방이사 관련 업무를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천위 재구성을 위한 협상

2011년 11월 17일 학교법인 대우학원 윤원석 이사장은 아주대학교 대학 평의회 강명구 의장에게 2012년 3월 3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3인의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공문의 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아주대학교 평의회 의장은 2011년 11월 23일 공문의 형식으로 법인에 아주대학교 정관에 규정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 비율(재단2, 아주대2, 아주자동차대1)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아주대 교수회의 질의에 답한) 교과부의 2011년 4월 공문에 따르면 아주대와 자동차대 간의 추천위원 구성 비율은 정관에 일방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양교 간에 협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인도 동의하여 양교의 평의회 의장이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아주자동차 대학의 김종순 의장님께서 아주대학을 방문하여 우리 측 의원들과 장시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 보내온 이메일에서 아주 자동차 대학 측은 빈약한 논거 하에 기존의 2 대 1 구도를 무조건 고집하여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장

그리하여 아주대학교 평의회회는 두 가지 주장을 공문의 형태로 2011년 12월 6일 재단에 발송하였습니다. 그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양 교간 협상이 결렬되었다. 양 교간의 예산 및 인원 규모를 반영하여 추천위 구성비율을 정관개정을 통하여 재조정하라.

(양 교는 교원 및 예산 등 규모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나

타내고 있으니 이 사실을 추천위 구성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주대는 정식 교원 611명에 일 년 예산이 6600여 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아주자동차대는 교원 35명에 일 년 예산 89억 원 정도입니다. 교원으로 치자면 17 대 1이 넘고 예산으로 치자면 약 75 대 1이 넘는데 그 대표구성에 있어 2 대 1임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추천위 구성에 재단 대표가 들어오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재단 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교체하라.

(사립학교법에서 개방이사제를 실시하는 것은 재단과 관계없는 인사가 재단의 전횡 가능성을 견제하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감시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더욱이나 현재 정관에 따르면 추천위가 개방이사의 두 배수를 추천하여 이 중에서 법인이 일배수인 3분을 고르도록 되어 있으므로(정관 제17조 제2항), 재단인사가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도(正道)를 통한 대학 발전을 위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핵심 중 핵심은 개방이사제의 실시이다. 그러나 개방이사제 실시 3년의 과거 행적을 반추하건대 개방이사제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주대의 현실이다. 재단이 선택한 개방감사가 (비전문가인 교수회가 찾아낸) 펀드불법투자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서 보듯이 재단의 입맛에 맞는 개방이사는 건강한 견제기능을 못하였다. 현행 정관에 규정된 추천위 조건으로는 도저히 개방이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나 규모에 비하여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동차대학의 '현실적' 선택이 개방이사제의 입법취지를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재단은 개방이사제의 껍데기 형식을 조작하여 사립학교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꼼수대신 그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정도(正道)를 걷기 바란다.

아주대학교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힘겨루기를 통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우월이 아니라 양방간 건강한 긴장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고양시키는 모두의 승리를 확신한다. 구성원 여러분 모두의 질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식

I. 박종구 전 직무대행 불법임용 조사위원회

본 대학은 2009년 3월 1일 박종구 전 교과부 제2차관이 교육대학원 정년보장 교수 및 신설된 교무부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내부적으로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본 임용과정은 우리 대학 역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의 단초로 이를 매듭짓는 것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추천한 위원 3인(인문대 문승재, 법전원 소병천, 의대 이재호)과 교무처장(박영동)을 조사위원으로 하는 박종구교수 특별채용절차조사위원회를 2011년 11월 1일에 구성, 해당 위원회에 임용과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그 기록, 그리고 개선방안의 제안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학교 및 재단 측 관련 서류 열람과 본 건에 대한 교수회의 조사보고서, 관계자들과의 면담 또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조사보고서의 초안 작성을 마무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조사보고서에는 사실의 확인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일정 정도의 판단이 기술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관계자들의 회담과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쳐 대학 본부에 의해 공식 보고서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III. 교수 권익 관련, 교수회 복지분과위원회 소집

경영대 교수 분회의 재정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게시한 박종구 교수에게 교직원이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 교수는 경영대 학장과 총장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교수회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현재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 후 해당 교직원의 징계에 대한 문제를 대의원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II. 연구년위원회 및 윤리강령제정위원회 가동

교수회에서는 제 39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이사회 결의로 폐지된 바 있는 3년 복무 6개월 연구년 제도의 부활을 위한 연구년위원회와, 아주대학교 교수 사회의 정신적 가치로서의 윤리강령제정을 위한 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구년위원회는 예홍진, 윤성승, 노명우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타 대학의 연구년 규정 자료 분석과 추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윤리강령제정위원회는 조성을, 오동석, 정영기, 김장훈, 신희천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의 윤리강령 자료를 토대로 각 영역별 윤리 강령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IV. 기타위원회 준비 소식

교수회에서는 펀드투자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와 건축비 관련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준비 중에 있다.

1) 펀드투자 관련 진상조사 위원회

본부 측에서는 박종구 전 직무대행 건과 같이 다루어 조속하게 매듭지을 것을 제안하였다. 교수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적 성격을 고려하여 다소간의 시일이 예상되기에 개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고 본부가 이를 수용하였다. 교수회에서는 이미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놓았으며 본부는 이준섭 총무처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축비 관련 의혹 진상 조사보고 위원회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튼실한 건물을 지어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구성원(특히 재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 현재 위원회 구성 준비 중에 있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편집자의 편지

-기획연재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시작하며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이 그랬듯이 내년에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격동의 한 해라고 말할 것이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극심한 변동의 와중에 놓여있고, 평화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희망의 저편에 건너가 있어서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 자체가 판타지 영역에 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불안과 불확실성은 이제 고정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사회적 논란은 건전한 대안을 찾는 생산적 논쟁이 아니라 정적을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한 궤변의 논리로 포장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국가적(공동체적) 비전의 부재라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 후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고액의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대학은 ‘평가’라는 무기로 자신을 공략하는 국가의 강력한 지배 권력에 대하여 전전긍긍해 하며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 교수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본래 왜 자신이 대학에 왔으며 또 학자가 되었는지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청춘은 사라지고 교수들의 학문은 경쟁의 무기로 바뀌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와 시장을 위한 전사/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명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교수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대학 현실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내적 성찰을 동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학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대학은, University라는 영어단어를 유학의 四書(대학, 논어, 맹자, 중용) 가운데 하나의 경전 명칭(대학)으로 옮겼던 데서 알 수 있듯이, ‘修己’와 ‘治人’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格物致知’를 통하여 지극한 지식

의 경지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에 나아가 밝은 도리를 밝힘으로써 지극히 선한 사회를 만드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대학은 원래 세상에서 분리된 상아탑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해석되었던 것(이 점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이나,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의 대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오늘 우리 보통사람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은 ‘공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등록금, 학점, 취업 등의 공포, 직장인들은 진급, 자녀교육, 퇴직이후의 생활에 대한 공포, 심지어 결혼과 출산 및 육아조차도 그 공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대로 모두가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버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은 ‘계획은 세울 수 있어도 꿈은 꿀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러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대학은 그러한 꿈을 키워주는 공간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실없는 실용주의, 꿈꾸지 못하는 관념주의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대학이 직면한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사색함으로써 대학을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꿈을 설계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거버넌스, 대학과 시장의 관계설정의 문제, 대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등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관심있는 필자들에게 기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좋은 원고와 가능하면 적극적 논쟁참여를 기대합니다.

탁류청론 편집위원 김태승